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
- 5월 18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후보 공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1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82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
-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본인, 청소년 상담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심사 거쳐 생활·학업·건강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86

“ 대한민국과 헝가리, 청소년·가족 분야 협력 약정 체결 ”
- 여성가족부-헝가리 문화혁신부, 청소년 교류에서 가족분야 확대 약정 체결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88

“ 고독사 20% 줄일 '게이트키퍼' 양성... 실태조사 5년→1년으로 단축 ”

[뉴스1, 최현만 기자, '23.05.18.] https://www.news1.kr/articles/5050102

“ " 한국 젊은층, 사회 높은 기대치에 압박 받아 스스로 고립 " ”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23.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8006800009

“ 10년간 버려진 아기 1200명... '보호출산제' 가 대안될까 ”

[서울경제, 정유민 기자, '23.05.2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M7YRYZ

“ “자녀는 기쁨” 보다 “부담” 응답 높은 곳은 서울 · 도쿄 뿐 ”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 '23.05.3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30/YWXN7MQQM5C4LN6PINXRH4KBWE

“ " 청소년, 40년 뒤엔 90%가 사라진다 ”... 위기의 한국 ”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3.05.30.] https://www.fnnews.com/news/202305301521250416

“ 2023년 가족실태조사 실시 ”
- 전국 1만 2천 가구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6

“ '국민 긴급돌봄' 추진... 청년 · 중장년도 돌봄서비스 대상 ”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3.05.31.]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52300530

“ 양육비 1억4천만원 안 준 친부... 검찰 수사 뒤 완납해 기소유예 ”

[한겨레, 이정하 기자, '23.05.3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4127.html

“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
- 평생동안 출산·돌봄 등 이유로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 10명 중 4명
- 코로나19 당시 일을 그만 둔 여성 66%가 30대, 직접 요인은 '긴급한 자녀돌봄 때문'
- 재택·원격근무, 임신중·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상승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늘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6.0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8

“ “출산 늘었다” 는 독일...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선지급' 뭐길래 ”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3.06.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21342434004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혼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2인)	2023-06-13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함.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의 3회 이상 양육비 이행 지속률이 56%에 그치는 등 지급 이행의 지속률이 낮게 나타나, 양육비 채무자가 최초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의원 등 11인)	2023-05-31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 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조·제2조· 및 제3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등 12인)	2023-05-31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 " 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혼인제도 상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혼인의 성립 " 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 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가족생활·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10인)	2023-05-31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10인)	2023-05-26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 바 있음. 이에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며, 한방 난임 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 (안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등 10인)	2023-05-25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3 및 제18조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20인)	2023-05-19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중・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20인)	2023-05-18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시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0인)	2023-0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하여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가.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 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등 10인)	2023-05-30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1조 및 제45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2인)	2023-05-24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유기, 체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에서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를 종용함에 따라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인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권 심사 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	2023-05-19	현행법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2인)	2023-06-14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 배우자 출산휴가 " 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1인)	2023-06-12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4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2인)	2023-06-05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20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함. 따라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 등 11인)	2023-06-02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1항제4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 등 11인)	2023-05-26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휴가기간이 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감소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휴일 등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런데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1인)	2023-05-18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 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 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치료 휴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2인)	2023-05-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 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 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8조의4 신설 등).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명	보도일	내용	기사링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획득으로 가족정책서비스 반부패・청렴경영 선도	2023-06-0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부패방지 및 공공서비스 청렴성 제고를 위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301) 인증을 획득함(23. 5., 산하기관 최초) 또한, 청렴・인권・갑질 시민감사관(옴부즈맨) 위촉 및 각종 청렴・인권 증진 정책 을 운영함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984&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가족관련 연구 동향

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양육·돌봄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기관이 모두 국가기관이거나 행정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며, 이행강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양육친의 주소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렇지만 우리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일개 부서로서의 지위만 확보하고 있을 뿐임.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하는 한국강가정진흥원의 업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강제라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나아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의 지급과 구상에 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함.	「법학논총,Vol.30 No.1, 202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bc59e72a8c2a5a8c85d2949c297615a
	양육비이행관리원 실무자의 아동학대 대응절차 요구도 연구	이 연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총 8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실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이행서비스 실무자들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절차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때 양육비이행서비스의 특성과 이혼가정 양육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함.	「가족정책연구,Vol.3 No.1, 2023, 한국가족정책학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3dc4ac3a6b6900c4884a65323211ff0
	코로나19 시기의 돌봄공백과 제도사용, 직장 내 차별과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 유자녀 여성의 돌봄 및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적 돌봄 체계의 마비가 여성 노동자의 고용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분석을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 중 중등 이하 자녀를 둔 남녀 노동자 5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순위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남녀노동자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안정성이 높았음. 반면, 코로나19 전후 노동시간의 감소폭이 클수록, 가족돌봄휴가 사용이나 직장 내 불이익이 있는 경우, 고용은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은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고용불안정성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음.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1호, 2023. 05,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ff65650a46c75236aae8a972f9116fb
정신 건강	우울 증상 완화를 위한 공감형 챗봇 개발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우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감형 챗봇 개발에 관한 연구임.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챗봇을 통해 우울한 감정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7권 제5호, 2023. 05, 한국정보통신학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6ac398bd48079b4c85d2949c297615a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국내 트위터 데이터 분석	Covid-19 팬데믹은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고립감의 수준을 증가시켰음.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이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심리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트위터에 게시된 트윗을 수집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23. 05,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b155730aac57351e6aae8a972f9116fb
가족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 청년기에 속한다. 그러나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제한적 지원을 받아 왔다. 한편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 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정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12&volume=5440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참여 청소년 미혼모 중 현재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는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업을 지속하는 10대 집단은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비율이 과반이었다. 청소년 미혼모는 환경상 학업 지속이 어렵지만,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출산 전후의 휴학 기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미혼모가 경제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육아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해 학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양육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와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자립 훈련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미혼모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학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학업과 관련한 적극 지원은 물론이고 양육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14&volume=54402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의 취약한 삶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확인한 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고립 청년과 그 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둔 청년을 포괄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낮다. 그리고 교육,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으로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대다수가 우울한 것으로 확인된다. 절반은 돌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돌봄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 청(소)년과 돌봄 시간이 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더 컸다. 그럼에도 가족돌봄 청(소)년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이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실제 돌봄 시간이 주당 21.6시간이라는 맥락에서 초과된 돌봄 시간을 줄여 주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10&volume=54402